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I. 고령화 시대의 도래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일이 가장 바라는 꿈일 것이다.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과학 및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농업생산의 증대 등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대단히 증가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오래 전에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고령사회 문제에 커다란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 노인들이 장수하는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가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변화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노인문제(예컨대, 빈곤, 부양, 건강, 수발, 여가, 가출, 학대, 방임, 자살, 등)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의 일반적 특성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구현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제주사회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노

인문제의 해결 방안을 간략히 제언하고자 한다.

II.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일반적 특성

우리사회에서 고령층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화가 저출산 현상과 동시에 진행되고, 고령화의 지역적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노인단독세대 및 요수발노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문제는 대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건강, 부양, 사회 심리적 측면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삶의 생존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노인들이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경제적 소득을 얻는 시기에 노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놓으면 별다른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지도 않고, 대신에 경제생활을 대개 자녀(특히 장남가족)에게 의존해 온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국가에서도 노인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오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 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등에 한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정년을 넘어 직장생활로부터 은퇴한 후에 경제력을 상실하여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혹은 특별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노인부부 혹은 독거노인들은 심지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힘들어 차상위계층 혹은 극빈층의 빈

곤가구로 전략하여 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하고, 동시에 노인취업을 위한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노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노인들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물론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갈수록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젊어서 보다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후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만성질환, 치매, 암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요수발노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노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대다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각종 질병을 예방, 검진 및 치료받을 수 있다. 혹은 공공 의료보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노인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노인건강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건강보험이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질병 치료에 약간의 도움은 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 수준이 못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예방, 검진 및 치료에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분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전통적 가족구조 하에서 노인부양 문제는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책임져야할 도덕적 의무였다. 그러나 핵가족이 점차 확산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활동(특히 취업)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노인 부양문제는 이제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거의가 자녀로부터 가능한 부양을 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무료요양원 시설에

서 부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지 가족(특히 아들)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부양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인들은 거의 생계유지조차 힘들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겪는 사회심리적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의 소외, 가출, 학대, 자살 그리고 성(性)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사람들은 정년에 이르면 사회생활로부터 은퇴하게 되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회로부터 격리감을 느끼고 고독한 존재임을 깨달아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가족 혹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지나친 심리적 압박과 더불어 정신적 불안(특히 우울증)은 자살로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노인자살률이 OECD 30개국 가운데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노인들이 하루 평균 4명꼴로 자살하고 있어서 사회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전통적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지배적인 시대엔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며 봉양을 받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대신에 노인은 귀찮은 대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학대(예컨대, 방임, 폭행, 살인, 유기 등)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가족내 및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및 권위 상실, 빈곤, 만성적 질병,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팽배, 물질만능주의 세태, 등을 들 수 있다.

III. 노인들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노인들도 비록 나이가 들어 신체적·정신적 노화현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 태도를 가져 여생을 보내는 뜻도 중요하

지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고령화 비율과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특히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장수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리적 정책수단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관광지역으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천하여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인력뱅크’ 제도를 조속히 정착화시켜 노인들의 취업, 고용 및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에 대하여 경로연금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긴급보호제도(긴급식품권과 긴급의료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들이 노후에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수혜 혜택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즉 노인들에게 포괄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현행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예컨대, MRI 검사, 예방적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철, 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시설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부양의무를 진 가족 구성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에 단기 및 주간보호제도를 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노인요양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보호, 주간보호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이 당면한 각종 사회·심리적 문제(예컨대, 소외, 가출, 자살, 학대, 성문제 등)들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노인전문상담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을 공경하는 도덕 혹은 사회윤리를 회복하는 사회적 운동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권리운동이나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노인보호 및 노인권익 신장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을 학대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 예방 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도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역동적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후기산업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로 변해 가는데 노인들도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재훈련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평생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고, 동시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